工業配置政策이 地域隔差解消에 기여한 效果

李 元 昼

I. 序

 우리나라에서 企業의 立地에 対하여 政府의 配置政策이 始動과 1970년 度 이후 立地에 対하여 政策을 통정하여 工業配置政策(industrial location po-

licy)이라 한다. 工業配置政策이 여러 가지 수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크게 나누어 세 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企業의 立地에 対하여 적절한 統制を 가하는 政策이다. 公害業所에 対한 移転命令, 工場新設에 対한 許可制, 開発制限區域의 設定 등이 이와 같은 적절적인 統制政策이다. 둘째, 企業으로 하여금 特定地域에 立地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政策이다. 地方移転事業에 対한 金融・税制 상의 혜택, 地方工業園地入住企業에 対한 地方税 免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째, 工業園地의 조성이다.

本稿의 목적은 이와 같은 工業配置政策이 地方經濟의 活性化에 対하여 효과를 分析하여 앞으로의 合適한 政策方案을 모색하는 데 있다.


著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本論文中 原稿을 보고 수정한 비언을 하여 맹uru 原著者。

1) 道路, 鉄道, 本資源開発 및 下水道 등의 社會間接資本 施設에 対한 投資에도 以上의 政策의 原則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고려는 本稿에서 제외 하였다.
시는 서울권 지역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서울권
의 주변지역이나 타지역으로 이적하는 데 있어
산업구조가 기여한 역할을 실질조사
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두명원의 연구(1982)
에서는 소득과, 지역구간의 요소를 역할과 산업구조
의 경제적 제한과, 지역간의 특이가, 지역간의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두근하여 그 이론에 의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론의 절대적 요소로, 산업구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다소 있었으나 현재까지
의 연구는 요소적 지역구간의 역할과 경제적인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경제적 요소를 본고하고, 지역구간
의 균형화를 통한 역할의 일관성을 본고하고, 지역구간, 즉
정부의 지역구간은 균형화의 방향으로 작용하
었음을 밝혀 내었다.
을 적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업의 배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업배치 정책의 목적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조화 있게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흔히 공업배치 정책의 목적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효용성을 지향시킨다는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공업배치 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배치 정책을 수립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공업배치 정책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할 수 있다. 첫째, 대도시권 특히 서울의 인구가 집중된 배치기로 정책이다. 서울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공공, 주택, 교통, 안보 등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치기로써 공업배치 정책이 시행되었다. 둘째,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주요 주요산업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역간의 균형을 위해 배치기로써 공업배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배치기로써 공업배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 목표가 항상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지에 있던 공장이 서울의 주변지역으로 전소하게 되면 서울의 인구 분산이 일어나 공업배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나 서울의 이외의 지역의 발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에 대한 효과적 성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정에서는 공업배치 정책의 목적은 이동 영향을 추구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정에서는 공업배치 정책이 대도시권 인구분산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도덕적 목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산업 정책을 근거로 하여 공업배치 정책은 공업배치 정책을 기술적으로 언급할 바와 같이 그
第Ⅱ． 우리나라 전반의
地域間 分布

본장에서는 60年代 이후 우리나라 전반의
地域間 分布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第1次 經済開発 5年計画이 시작된 1962
年부터 1983年의 기간중 우리나라의 國民總生
產은 不變価格 基準으로 5倍 이상 성장하였으
며, 1人皆 國民總生產은 87달러에서 1,884달
러로 증가되었다. 이 기간동안에는 產業構造
에도 큰 변화가 있어서 1962년度에 製造業部
門의 附加價值가 國民總生產에서 차지하는 比
重은 9.1%였으나 1983年度에는 29.0%로 증
대되었다. 반면에 農水產業部門의 附加價值의
比重은 43.3%에서 16.3%로 감소되었다.

〈表1〉 地域別 人口 및 人口增加率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全國</td>
<td>24,989</td>
<td>31,434</td>
<td>38,124</td>
<td>100.0</td>
<td>100.0</td>
<td>100.0</td>
<td>2.29</td>
<td>1.93</td>
</tr>
<tr>
<td>命</td>
<td>2,445</td>
<td>5,525</td>
<td>8,518</td>
<td>9.8</td>
<td>17.6</td>
<td>22.3</td>
<td>8.15</td>
<td>4.33</td>
</tr>
<tr>
<td>釜山</td>
<td>1,164</td>
<td>1,876</td>
<td>3,217</td>
<td>4.7</td>
<td>6.0</td>
<td>8.4</td>
<td>4.77</td>
<td>5.39</td>
</tr>
<tr>
<td>京畿</td>
<td>2,749</td>
<td>3,353</td>
<td>5,024</td>
<td>11.0</td>
<td>10.7</td>
<td>13.2</td>
<td>1.99</td>
<td>4.04</td>
</tr>
<tr>
<td>江原</td>
<td>1,637</td>
<td>1,865</td>
<td>1,823</td>
<td>6.6</td>
<td>5.9</td>
<td>4.8</td>
<td>1.30</td>
<td>-0.23</td>
</tr>
<tr>
<td>忠南</td>
<td>1,370</td>
<td>1,480</td>
<td>1,451</td>
<td>5.5</td>
<td>4.7</td>
<td>3.8</td>
<td>0.77</td>
<td>-0.20</td>
</tr>
<tr>
<td>忠南</td>
<td>2,528</td>
<td>2,858</td>
<td>3,009</td>
<td>10.1</td>
<td>9.1</td>
<td>7.9</td>
<td>1.23</td>
<td>0.51</td>
</tr>
<tr>
<td>全北</td>
<td>2,395</td>
<td>2,432</td>
<td>2,329</td>
<td>9.6</td>
<td>7.7</td>
<td>6.1</td>
<td>0.15</td>
<td>-0.43</td>
</tr>
<tr>
<td>全南</td>
<td>3,553</td>
<td>4,005</td>
<td>3,848</td>
<td>14.2</td>
<td>12.7</td>
<td>10.1</td>
<td>1.20</td>
<td>-0.40</td>
</tr>
<tr>
<td>慶南</td>
<td>3,848</td>
<td>4,556</td>
<td>5,051</td>
<td>15.4</td>
<td>14.5</td>
<td>13.2</td>
<td>1.69</td>
<td>1.03</td>
</tr>
<tr>
<td>慶北</td>
<td>3,018</td>
<td>3,119</td>
<td>3,383</td>
<td>12.1</td>
<td>9.9</td>
<td>8.9</td>
<td>0.35</td>
<td>0.81</td>
</tr>
<tr>
<td>濟州</td>
<td>282</td>
<td>365</td>
<td>471</td>
<td>1.1</td>
<td>1.2</td>
<td>1.2</td>
<td>2.58</td>
<td>2.55</td>
</tr>
</tbody>
</table>

資料：第2次國土綜合開發計劃 第2篇 人口定着 基盤 및 造成〈出本：國土開發研究院，1982.〉，p.3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산업화의 전환과 함께 기대되는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의 분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의 인구는 급격한 성장을 한 반면, 남부도시의 인구는 감소 내지는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의 전국인구에 대한 대도시 정체된 현상을 반영하여 1960년에 비하여 늘어난다. 이는 2차, 3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도시권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한 반면,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공업도시의 인구는 감소 내지는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분포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대도시 정체된 현상을 반영하여 1960년에 비하여 낮아진다. 이는 2차, 3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도시권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한 반면,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으로 공업도시의 인구는 감소 내지는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산업별 분포

<table>
<thead>
<tr>
<th>1960</th>
<th>1970</th>
<th>1980</th>
</tr>
</thead>
<tbody>
<tr>
<td>산업 분류</td>
<td>산업별 산업수</td>
<td>산업별 산업수</td>
</tr>
<tr>
<td>(천만 원)</td>
<td>(십억 원)</td>
<td>(천만 원)</td>
</tr>
<tr>
<td>인구</td>
<td>273</td>
<td>549,793</td>
</tr>
<tr>
<td>서</td>
<td>64</td>
<td>183,132</td>
</tr>
<tr>
<td>부산</td>
<td>137</td>
<td>82,260</td>
</tr>
<tr>
<td>경기</td>
<td>104</td>
<td>61,102</td>
</tr>
<tr>
<td>강원</td>
<td>295</td>
<td>9,234</td>
</tr>
<tr>
<td>충북</td>
<td>101</td>
<td>23,578</td>
</tr>
<tr>
<td>충남</td>
<td>42</td>
<td>16,338</td>
</tr>
<tr>
<td>제주</td>
<td>43</td>
<td>45,441</td>
</tr>
<tr>
<td></td>
<td>198</td>
<td>82,260</td>
</tr>
<tr>
<td></td>
<td>295</td>
<td>9,234</td>
</tr>
<tr>
<td></td>
<td>42</td>
<td>16,338</td>
</tr>
<tr>
<td></td>
<td>43</td>
<td>45,441</td>
</tr>
<tr>
<td></td>
<td>198</td>
<td>82,260</td>
</tr>
<tr>
<td></td>
<td>295</td>
<td>9,234</td>
</tr>
<tr>
<td></td>
<td>42</td>
<td>16,338</td>
</tr>
<tr>
<td></td>
<td>43</td>
<td>45,441</td>
</tr>
</tbody>
</table>

【資料】중앙통계청, 『공업통계조사보고』, 자산도.

2) 산업화의 의미에서 지역의 산업분포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분포를 나타내는 산업구조와 산업별 산업수의 비중과 산업별 산업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논의한다.
제조업의 집중 현상이 대도시에서 나타난 반면 70년대에는 농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제조업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따라잡는 대도시 집중 현상이 평균적으로 만드는 제조업의 성장은 둔화되었다. 전력부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의 성장은 1960년에는 6.2%, 1970년에는 4.2%, 1980년에는 4.7%로 감소하였다. 물론 제조업의 성장률은 그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이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정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살펴보아도 제조업 대도시의 기준으로 한 경우와 유사한 추세임을 <표 2>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대도시 집중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도시 집중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둔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는 곧 흔히 제기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화가 동기간중에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立地統制政策

立地統制政策은 크게 분류하여 공장의 新設 또는 增設에 대한 許可와 移轉命令으로 구분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政策의 現況과 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기존공장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대탄불.
설 및 중설에 대한 통제는 수도권역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工业配置基准计划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首都圈整備법에서는 수도권을 여러 개의 지역
으로 분류하여 공업의 재배치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수도권내에서의 
企業의 분산, 즉 開発制限地域으로부터 開発誘導地域
으로 企業이 신설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신설 또는 종설에 대
한 許可制는 기업이 수도권내의 어느 지역에
立地할 것인가에 대한 統制手段로서만 이용
되고 있는 반면 南部지역으로 공업의 立地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단이 되는 것도 있고 있다.

2. 移轉命令

工業配置法 第15條에 의거하면 商工부長官은
移轉促進地域에서 移轉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여 그 移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移轉命令은 이에 移轉하여야 할 공
장의 범위, 移轉時期 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한 후 施行되며 移轉命令을 받은 공
장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
장을 移轉하여야 하나 무거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現行 工業配置法상에는 移轉對象에서 제외
되는 업종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업종
만이 移轉對象이 되고 있다. 移轉命令 시행
시 고려되는 두 가지 기준은 地域經濟의 安定
의・均衡의 發展과 國防上・國民經濟上の 基
요성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移轉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工業配置審議
委員會의 심의를 거쳐도록 되어 있다.

移轉命令은 企業의 立地를 통제하는 수단중
가장 강력한 방면으로 그 대상이 소수으로
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大都市
圈의 公害業所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고 있다.

大都市圈의 公害業所에 대한 移轉命令이 19
70년부터 1980년까지의 사이에 127건이 있었
는데 115건은 京畿地域으로, 6건은 廣南地域으
로 移轉하였다. 따라서 移轉命令에 의한 工業
의 再配置效果는 地域経済を 대도시로부터 그
주변지역으로 移転시키는 데 국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장의 신설이나 종설에 대한
許可制과 移轉命令은 法의 취지상 地域開発을
위해 工業을 再配置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施行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단이 南部地域
의 活性화를 위하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立地統制政策이 이와 같이 매우 조심
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市
場経済を 徹底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
해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 政策運用에 있어서도 直接의 統制手段가
남부지역 경제의 活性화에 사용되지 않으려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통제수
단보다는 間接의 先因施策이 資源分配의 優
勢를 줄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地域經濟 活性
화를 위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수단보다는
다음 측면에서 언급될 間接의 誘因施策을 사용
하는 것이 國民経済의 촉진에서 볼 때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立地誘因政策

後地域 経済의 活性化를 위하여 각종 誘因
施策이 시행되고 있다. 본문에는 이러한 공진이 현황과 효과를 분석한다. 본문에서 고려한 공진은, 공진을 이용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진을 시행하여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공진을 시행한 공진은, 공진을 시행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진을 시행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1. 공진을 시행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진의 10% 이내에서 공진이 시행된다. 공진을 시행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진을 시행한 공진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자료를 충동하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진은 공진이 행해진 도로 내에 할 세금을 얻기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에 부과될 세금만큼을 분리하고 취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얻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진이 행해진 도로 내에 할 세금을 얻기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에 부과될 세금만큼을 분리하고 취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얻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였다.

$$t - \frac{t}{3(1+r)^3} - \frac{t}{3(1+r)^2} - \frac{t}{3(1+r)}$$

여기서 $r$은 적립기간 중 적용되는 납입시세이다. 납입시세율은 10%로 하여 공진에 따른 재산이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3%이며 이익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약 7.5%이다.

이러한 공진은 공진이 행해진 도로 내에 할 세금을 얻기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에 부과될 세금만큼을 분리하고 취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얻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진이 행해진 도로 내에 할 세금을 얻기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립된 금액에 부과될 세금만큼을 분리하고 취득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얻기 위하여 공진을 시행하였다.
2. 地方移轉事業의 施設投資에 대한

投資税額控除 또는 一時償却

租税減免相関法 第43條에 의하건 어느도시 안
에서 지방으로 工場施設의 전부를 移轉하여
사업을 시작한 때, 移轉後 그 관장에서 적절
사용하는 事業用資產에 대하여는 매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혜택이 적용된다.

1) 周定投資金額의 100분의 6(國産機材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税 또는 法人税에서
   控除
2) 周定資産의 價格を50%를 移轉한
   날이 흉하는 課税年度에 一時償却

移轉에 따르면 投資U가 하고 税額控除額은
s라 하면 税額控除에 따르면 納税額의 감소는
y*1/s이다. 따라서 納税 全額を基準으로 한 周定制
度에 의한 投資1단위에 대한 優待는 다
음과 같다.

\[ s \left( \frac{1}{1-\gamma} \right) \] ..........................(2)

이때 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이 防災機材를
使用한 것으로 가정하면 周定制에 의한 優待는
投資1단位에 대해 약 14%임을 알 수 있다.

一時償却로 선택한 경우의 優待는 納稅額에
 있어서 설정법을 사용한 경우와 固定運用を
使用한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施設의
耐用年数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여러 가지 현
실적인 가정하에서 固定運用이 固定運用보다 유리
하므로 固定運用의 경우만을 선택하여 一時償却
의 優待를 알아보자. 固定運用下에서 投資1單
位単에 納稅額는

\[ Z(\delta) = \frac{\delta}{r+\delta} \left( 1-e^{-(r+\delta)T} \right) \] ..........................(3)

여기서 \( \delta \)는 納稅額 納稅額로 固定運用
환원한 것이고, r는 割引率이며, T는 納稅額
耐用年数이다. T와 \( \delta \)의 相関是 다음과
같다.

\[ \delta = -\ln(0.1/T) \] ..........................(4)

그리고 50%의 一時償却이 허용된 경우 投
資1単位単에 納稅額는

\[ Z(\delta) = \left( \frac{1}{1+\frac{1}{2}\delta \left( 1-e^{-(r+\delta)T} \right)} \right) \]

.................................................(5)

따라서 投資1単位単 50% 一時償却에 의한

<table>
<thead>
<tr>
<th>5</th>
<th>0.0252</th>
<th>0.0342</th>
<th>0.0422</th>
<th>0.0493</th>
<th>0.0556</th>
<th>0.0612</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0.0342</td>
<td>0.0493</td>
<td>0.0612</td>
<td>0.0708</td>
<td>0.0787</td>
<td>0.0852</td>
</tr>
<tr>
<td>20</td>
<td>0.0493</td>
<td>0.0708</td>
<td>0.0852</td>
<td>0.0953</td>
<td>0.1027</td>
<td>0.1084</td>
</tr>
<tr>
<td>25</td>
<td>0.0556</td>
<td>0.0787</td>
<td>0.0931</td>
<td>0.1027</td>
<td>0.1096</td>
<td>0.1148</td>
</tr>
</tbody>
</table>

4) 師氏의 一時償却 一時償却模型을 가정하였다. 실제의 納稅額은 周定制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一時償却
   優待은 실제에 대한 近似値로서 耐用年数에 따라만 優待의 变化가 있다.
4. 地方税의 免除

地方税法 第110条에 의하면 퇴직시 내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지방에서 취득한 不動産에 대하여 登錄税 및 取得税를 면제한다. 現税法上 동록세는 부동산가액의 3%, 취득세는 2%이므로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부동산가액의 5%이다.

5. 地方工業獎勵地區에 입주한 企業體에 대한 地方税免除

地方税法 第110条에 의하면, 工業配置法 规定에 의한 誘致地區에 입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建築에서 설립한 바와 같이 同制度에 의한 혜택은 부동산가액의 5%이다. 購入할 사항은 同制度는 앞에서 제시된 稅法상의 支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제시된 稅制上の 支援은 모두 大都市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반면 同制度는 地方工業獎勵地區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체에 적용된다. 즉, 신규기업체이거나 大都市圈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이전하여 은 기업에도 그 혜택이 부여된다.

6. 誘因施策의 移轉促進效果

 앞에서 大都市圈에서 地방으로 이전하는 事業體에 대한 稅制上の 支援内容과 그 혜택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支援制度의 移轉促進效果를 검토해 보자.

논리를 전개의 편의상 먼저 立地의 特性에 대
하여 중립적인 사업체라는 시장에서 중립적인 사업체라는 대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업체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업체에게는 원료 구입, 제품매매, 인력교환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의 용량이 대대적으로 지방의 영향이 일어나다.

중립적 사업체임에도 약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다. 첫째, 재고시설의 응용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생산공장의 경우 현재의 생산시설을 일치시켜 새로운 시설로 이주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이전할 수 없는 시설이나 토지,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르는 용역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겠으나 우선적으로 이상의 두 가지 비용에 대하여 현행제품의 혜택으로 알려주기 보상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로 하다.

앞서에서 설명하였듯이 전통적인 사업체에 대하여는 전통적이든 혜택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혜택은 전통적인 일부분을 보상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혜택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혜택에 관한 현행제품의 혜택으로는 중립적 사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전통할 수 없는 자본의 지방에 대하여는 외래의 보다. 전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보면 자본의 전통적이고 새로운 구입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통적이고 새로운 지역에 따르는 혜택과 공공재산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매회나지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의 혜택과 세제율 공정 구입에 따른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본의 대기업과 구입에 따르는 이용비용은 현행제품의 혜택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현행제품에는 이러한 이용비용의 면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혜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본의 혜택이 1차적 해표 또는 2차적 해표는 전통적 혜택의 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이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경우 현행제품의 혜택이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혜택을 거쳐 현재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혜택을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제품에서 자본과 자본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전통적 혜택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전통적인 혜택에 의하여 보상되거나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전통적에 따르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혜택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부담과 혜택을 보상함으로서 기업은 전통적 혜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혜택은 기업이 직접 자본이야 하는 것을 보다, 전통적 혜택은 전통적 혜택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불해야 함을 100만원의 혜택을 100만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첫째, 혜택이 1차적 해표 또는 2차적 해표는 기업이 공제할 혜택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수
모든 수익성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이다. 계약금의 해체는 사업의 수익성에 있는 것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체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다. 반면에 이자비용은 사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지불하고 감수해야 하며, 때문에 기업의 임장으로서는 이러한 비용 지불을 거절한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의심하는 기업에게는 계약금에 의한 해체의 임대값에 처할 수 없다. 여기서 최소한 기업의 유의한 기업에게는 계약금에 의한 해체의 임대값에 처할 수 없다. 기업의 계약금에 임대값을 양허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따르는 비용이 앞에서 제시한 이전의 이전은 비용과 임대료에 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을 하는 동안 플랜을 중단하게 함에 따르는 달러, 기업의 희생이 여전히 고려되는 수익이 수반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을 기업 자체가 이전한 것은 중요하다. 어려운 직업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전 비용이란은 제조업을 중단하게 함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기업은 객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방해하는 영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계약금의 비용은 계약금으로는 합리적이며 중립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을 유도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전의 지방이 불리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유도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유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현재 카그이하의 수요는 집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전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과다하여 이전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이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예이 어려운 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일반적으로 대형 국방 이전의 경우 이전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수요들의 수요가 일부로 조사한 결과, 318개 기업중 2개의 기업만이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전에 따르는 계약금의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전을 동반하는 이전의 이전은 비용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이전의 이전은 이전을 받는 기업의 불익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겠다.

V. 금융산업의 기회

금융산업의 기업은 집단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약에 따라 해체된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금융산업은 정상적인 계약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의 도움을 줄다. 즉 금융기업들은 상호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업에 서 기업간의 재배임을 얻으며, 공공의 도움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금융산업을 조성하는 목록을 대체로 본다면, 국방 기업의 기업은 구도마치 주요산업이 단일이 주요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없애, 바른 금융산업의
파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공장을 분산시키고 지방 및 [[곡지]]에서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수 있다. 따라서 [[공중공원]]의 설립로와 지역간 배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공중공원의 [[현황]]과 [[지리]]를 조사하여 공중공원의 [[구조]]가 [[지리]]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중공원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前章]]에서 언급된 [[지리]]와 다르면 [[制制]]의 [[惠惠]가 부여된다. 또한 각 공중공원의 [[구조]]에 입주자에게 대한 [[支援]]이 있다. 공중공원의 [[開開]]에 대하여는 특정[意味]사업의 경우 [[金融]]支援을 하고 있다. [[中小]][[事業]]의 경우 우선 [[業務]]支援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輸輸]]에서의 입주한 기업은 [[外資]][[入入]]가 대체된 지역으로서 무역을 향유할 수 있다.

(표 4)는 1983년 현재 건국적으로 既造成과 未造成이 각각 44개로 [[地地]]의 [[類型]]로 분류하여 각각의 [[設設]]根据法, [[設設]]지역수, 총 면적, 총중립원수, 총생산액 등을 수록하였다. 공중공원지역 조성면적으로 보나 중립원수로 보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중공원은 주로 [[産産]]의 [[開開]]으로 전문화된 공중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중공원에 개발되었다. 공중공원 [[開開]]은 1985년 현재 전체 44개 공중공원지역 조성 총면적의 79%, 중립원수의 43%, 1983년도 총생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기지개발구역은 [[産産]][[化化]]하여 중화학기지와 특수기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표 5)에 수록되어 있다. [[地方]]공중공원의 [[開開]] 지역은 공중공원의 [[開開]]로 지방공단으로 [[地域]]의 [[所得]]支援을 한다고 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지방]]공중공원개발지구는 (표 6)과 같이 건국에 산재되어 있다. 공중공원[[業務]]지역은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모두 6개에 지정되어 있다.

<table>
<thead>
<tr>
<th>根據法</th>
<th>既造成主要工業園地</th>
<th>造成對象面積(千m²)</th>
<th>總從業員名(千名)</th>
<th>總生産額(10億円)</th>
</tr>
</thead>
<tbody>
<tr>
<td>1. 産業基礎開発區域</td>
<td>産業基礎開発促進法(73年[公開]) 및 石油化學工業基盤法(62年[公開])&lt;sup&gt;2&lt;/sup&gt;</td>
<td>11(21)</td>
<td>95,644</td>
<td>54,511</td>
</tr>
<tr>
<td>(韓國輸出工團 1, 2, 3團地)</td>
<td>輸出產業工團開発促進法</td>
<td>1(1)</td>
<td>1,978</td>
<td>1,978</td>
</tr>
<tr>
<td>2. 地方産業開発區域</td>
<td>地方産業開発促進法(70年[公開])</td>
<td>15(25)</td>
<td>22,161</td>
<td>2,461</td>
</tr>
<tr>
<td>3. 工業地域</td>
<td>都市計画法(71年[公開])</td>
<td>10(16)</td>
<td>10,474</td>
<td>218</td>
</tr>
<tr>
<td>4. 工業基礎地域 및 中小企業示範地域</td>
<td>工業配置法(77年[公開]) 및 中小企業奨励法(78年[公開])</td>
<td>5(11)</td>
<td>976</td>
<td>125</td>
</tr>
<tr>
<td>5. 輸出自由地域</td>
<td>輸出自由地域開設促進法(70年[公開])</td>
<td>2(4)</td>
<td>1,133</td>
<td>1,133</td>
</tr>
<tr>
<td>6. 農漁村地域工業開発促進地區</td>
<td>農漁村地域開設促進促進法(84年[公開])</td>
<td>0(7)</td>
<td>0</td>
<td>0</td>
</tr>
<tr>
<td>總計</td>
<td>44(85)</td>
<td>132,366</td>
<td>57,315</td>
<td>189,681</td>
</tr>
</tbody>
</table>

注: 1) 既造成主要工業園地 44個所에 대한數値
2) 蘇州石油化學工業園地
표 5. 산업기지 개발공간의 개발현황

<table>
<thead>
<tr>
<th>園地名</th>
<th>地域別</th>
<th>地域面積(千㎡)</th>
<th>造成</th>
<th>未造成</th>
<th>計</th>
<th>入住業體數(個)</th>
<th>僱員數(千名)</th>
<th>1983生產額(10億원)</th>
</tr>
</thead>
<tbody>
<tr>
<td>만월중단</td>
<td>경기</td>
<td>6,687 1,434</td>
<td>8,121</td>
<td>638</td>
<td>31.4</td>
<td>462</td>
<td></td>
<td></td>
</tr>
<tr>
<td>북평공단</td>
<td>경원</td>
<td>50 1,280</td>
<td>1,330</td>
<td>2</td>
<td>0.3</td>
<td>210</td>
<td></td>
<td></td>
</tr>
<tr>
<td>여천공단</td>
<td>전남</td>
<td>11,990 4,485</td>
<td>16,475</td>
<td>34</td>
<td>5.4</td>
<td>2,821</td>
<td></td>
<td></td>
</tr>
<tr>
<td>구미공단</td>
<td>경북</td>
<td>12,506 190</td>
<td>12,696</td>
<td>229</td>
<td>50.1</td>
<td>1,227</td>
<td></td>
<td></td>
</tr>
<tr>
<td>포항공단</td>
<td>경북</td>
<td>4,821 1,721</td>
<td>6,542</td>
<td>76</td>
<td>13.2</td>
<td>452</td>
<td></td>
<td></td>
</tr>
<tr>
<td>창원공단</td>
<td>경남</td>
<td>17,332 8,572</td>
<td>25,904</td>
<td>128</td>
<td>45.2</td>
<td>1,226</td>
<td></td>
<td></td>
</tr>
<tr>
<td>울산-미도공단</td>
<td>경남</td>
<td>29,352 22,269</td>
<td>51,521</td>
<td>118</td>
<td>69.1</td>
<td>2,814</td>
<td></td>
<td></td>
</tr>
<tr>
<td>송산공단</td>
<td>경남</td>
<td>5,246 11,686</td>
<td>16,932</td>
<td>15</td>
<td>5.6</td>
<td>996</td>
<td></td>
<td></td>
</tr>
<tr>
<td>목포도</td>
<td>전남</td>
<td>2,149 1,825</td>
<td>3,974</td>
<td>1</td>
<td>3.8</td>
<td>91</td>
<td></td>
<td></td>
</tr>
<tr>
<td>울산도</td>
<td>전남</td>
<td>3,101 89</td>
<td>3,190</td>
<td>2</td>
<td>30.0</td>
<td>402</td>
<td></td>
<td></td>
</tr>
<tr>
<td>울산석유화학공단</td>
<td>경남</td>
<td>2,510 960</td>
<td>3,470</td>
<td>20</td>
<td>3.5</td>
<td>510</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95,444 54,511</td>
<td>150,155</td>
<td>1,263</td>
<td>257.6</td>
<td>11,211</td>
<td></td>
<td></td>
</tr>
</tbody>
</table>

注：1) 産業基於開發區域의 개발현황 의 園地名 | 地域別 | 地域面積(千㎡) | 造成 | 未造成 | 計 | 入住業體數(個) | 僱員數(千名) | 1983生產額(10億원)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춘천지방공단</td>
<td>강원</td>
<td>494</td>
<td>494</td>
<td>27</td>
<td>1.8</td>
<td>35</td>
<td></td>
<td></td>
</tr>
<tr>
<td>원주지방공단</td>
<td>강원</td>
<td>397</td>
<td>397</td>
<td>22</td>
<td>1.7</td>
<td>48</td>
<td></td>
<td></td>
</tr>
<tr>
<td>청주지방공단</td>
<td>충북</td>
<td>2,116 641</td>
<td>2,757</td>
<td>80</td>
<td>18.2</td>
<td>369</td>
<td></td>
<td></td>
</tr>
<tr>
<td>충주지방공단</td>
<td>충북</td>
<td>21 1,222</td>
<td>1,243</td>
<td>3</td>
<td>0.2</td>
<td>1</td>
<td></td>
<td></td>
</tr>
<tr>
<td>대전지방공단</td>
<td>충남</td>
<td>1,256</td>
<td>1,256</td>
<td>87</td>
<td>12.0</td>
<td>272</td>
<td></td>
<td></td>
</tr>
<tr>
<td>전주지방공단</td>
<td>전북</td>
<td>1,326</td>
<td>1,326</td>
<td>60</td>
<td>10.6</td>
<td>241</td>
<td></td>
<td></td>
</tr>
<tr>
<td>인제지방공단</td>
<td>전북</td>
<td>1,108</td>
<td>1,108</td>
<td>90</td>
<td>10.5</td>
<td>159</td>
<td></td>
<td></td>
</tr>
<tr>
<td>군산공단</td>
<td>전남</td>
<td>2,943 208</td>
<td>3,151</td>
<td>31</td>
<td>2.0</td>
<td>94</td>
<td></td>
<td></td>
</tr>
<tr>
<td>광주지방공단</td>
<td>전남</td>
<td>2,771</td>
<td>2,771</td>
<td>211</td>
<td>10.2</td>
<td>145</td>
<td></td>
<td></td>
</tr>
<tr>
<td>하남공단</td>
<td>경남</td>
<td>1,534</td>
<td>1,534</td>
<td>76</td>
<td>0.6</td>
<td>3</td>
<td></td>
<td></td>
</tr>
<tr>
<td>목포지방공단</td>
<td>전남</td>
<td>460</td>
<td>460</td>
<td>39</td>
<td>5.5</td>
<td>59</td>
<td></td>
<td></td>
</tr>
<tr>
<td>순천지방공단</td>
<td>경남</td>
<td>592</td>
<td>592</td>
<td>10</td>
<td>5.7</td>
<td>56</td>
<td></td>
<td></td>
</tr>
<tr>
<td>눈동공단</td>
<td>경북</td>
<td>3,309</td>
<td>3,309</td>
<td>76</td>
<td>2.7</td>
<td>24</td>
<td></td>
<td></td>
</tr>
<tr>
<td>양산공단</td>
<td>경남</td>
<td>1,547</td>
<td>1,547</td>
<td>67</td>
<td>7.7</td>
<td>162</td>
<td></td>
<td></td>
</tr>
<tr>
<td>진주상염공단</td>
<td>부산</td>
<td>2,287 390</td>
<td>2,677</td>
<td>217</td>
<td>7.2</td>
<td>27</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22,161 2,461</td>
<td>24,622</td>
<td>1,096</td>
<td>97.3</td>
<td>1,695</td>
<td></td>
<td></td>
</tr>
</tbody>
</table>

注：1) 地方工業開発公開於地域別 25個所 중 앞의 표의 園地名 | 地域別 | 地域面積(千㎡) | 造成 | 未造成 | 計 | 入住業體數(個) | 僱員數(千名) | 1983生產額(10億원)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춘천지방공단</td>
<td>강원</td>
<td>494</td>
<td>494</td>
<td>27</td>
<td>1.8</td>
<td>35</td>
<td></td>
<td></td>
</tr>
<tr>
<td>원주지방공단</td>
<td>강원</td>
<td>397</td>
<td>397</td>
<td>22</td>
<td>1.7</td>
<td>48</td>
<td></td>
<td></td>
</tr>
<tr>
<td>청주지방공단</td>
<td>충북</td>
<td>2,116 641</td>
<td>2,757</td>
<td>80</td>
<td>18.2</td>
<td>369</td>
<td></td>
<td></td>
</tr>
<tr>
<td>충주지방공단</td>
<td>충북</td>
<td>21 1,222</td>
<td>1,243</td>
<td>3</td>
<td>0.2</td>
<td>1</td>
<td></td>
<td></td>
</tr>
<tr>
<td>대전지방공단</td>
<td>충남</td>
<td>1,256</td>
<td>1,256</td>
<td>87</td>
<td>12.0</td>
<td>272</td>
<td></td>
<td></td>
</tr>
<tr>
<td>전주지방공단</td>
<td>전북</td>
<td>1,326</td>
<td>1,326</td>
<td>60</td>
<td>10.6</td>
<td>241</td>
<td></td>
<td></td>
</tr>
<tr>
<td>인제지방공단</td>
<td>전북</td>
<td>1,108</td>
<td>1,108</td>
<td>90</td>
<td>10.5</td>
<td>159</td>
<td></td>
<td></td>
</tr>
<tr>
<td>군산공단</td>
<td>전남</td>
<td>2,943 208</td>
<td>3,151</td>
<td>31</td>
<td>2.0</td>
<td>94</td>
<td></td>
<td></td>
</tr>
<tr>
<td>광주지방공단</td>
<td>전남</td>
<td>2,771</td>
<td>2,771</td>
<td>211</td>
<td>10.2</td>
<td>145</td>
<td></td>
<td></td>
</tr>
<tr>
<td>하남공단</td>
<td>경남</td>
<td>1,534</td>
<td>1,534</td>
<td>76</td>
<td>0.6</td>
<td>3</td>
<td></td>
<td></td>
</tr>
<tr>
<td>목포지방공단</td>
<td>전남</td>
<td>460</td>
<td>460</td>
<td>39</td>
<td>5.5</td>
<td>59</td>
<td></td>
<td></td>
</tr>
<tr>
<td>순천지방공단</td>
<td>경남</td>
<td>592</td>
<td>592</td>
<td>10</td>
<td>5.7</td>
<td>56</td>
<td></td>
<td></td>
</tr>
<tr>
<td>눈동공단</td>
<td>경북</td>
<td>3,309</td>
<td>3,309</td>
<td>76</td>
<td>2.7</td>
<td>24</td>
<td></td>
<td></td>
</tr>
<tr>
<td>양산공단</td>
<td>경남</td>
<td>1,547</td>
<td>1,547</td>
<td>67</td>
<td>7.7</td>
<td>162</td>
<td></td>
<td></td>
</tr>
<tr>
<td>진주상염공단</td>
<td>부산</td>
<td>2,287 390</td>
<td>2,677</td>
<td>217</td>
<td>7.2</td>
<td>27</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22,161 2,461</td>
<td>24,622</td>
<td>1,096</td>
<td>97.3</td>
<td>1,695</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설명이 있었다. 그중에 이러한 공업단지들이 지역간의 어려움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7>에는 지역별로 공업단지의 분포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지역과 부산이 포함된 경남지역은 조성면적의 59%, 쌍용수의 53%, 중업원수의 63%, 생산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업단지의 성장성은 공장의 성장성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공업단지의 조성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성은 고려가 깊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적차가 심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업단지의 성장성은 <표 2>에서 알 수 있으며, 공업단지의 조성은 지역간의 균형성에 대한 효과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VI. 공업단지의 지역간 이전적 실적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업단지 빈도는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 이전을 한 데 반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 있으나 그 실적이란 뜻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실정이다. 本상에서는 이러한 이전을 1970~80년 기간 중의 공업단지 이전이 이전상태를 살펴봄으로

<table>
<thead>
<tr>
<th>공업단지</th>
<th>조성면적(㎢)</th>
<th>조성면적(㎢)</th>
<th>조성면적(㎢)</th>
<th>조성면적(㎢)</th>
<th>조성면적(㎢)</th>
<th>조성면적(㎢)</th>
</tr>
</thead>
<tbody>
<tr>
<td>조성면적</td>
<td>137,287</td>
<td>111,325</td>
<td>284,612</td>
<td>575.3</td>
<td>17,480</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2,163</td>
<td>2,163</td>
<td>322</td>
<td>68.0</td>
<td>1,931</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934</td>
<td>934</td>
<td>86</td>
<td>0.8</td>
<td>-</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13,854</td>
<td>26,738</td>
<td>40,592</td>
<td>87.5</td>
<td>1,684</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1,100</td>
<td>2,433</td>
<td>3,533</td>
<td>83</td>
<td>370</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2,137</td>
<td>2,300</td>
<td>4,437</td>
<td>18.4</td>
<td>278</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2,165</td>
<td>1,527</td>
<td>3,142</td>
<td>12.7</td>
<td>278</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5,808</td>
<td>241</td>
<td>6,139</td>
<td>269</td>
<td>550</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18,752</td>
<td>14,499</td>
<td>33,251</td>
<td>445</td>
<td>324</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21,850</td>
<td>4,473</td>
<td>26,333</td>
<td>950</td>
<td>115.6</td>
<td></td>
</tr>
<tr>
<td>조성면적</td>
<td>65,047</td>
<td>59,124</td>
<td>124,171</td>
<td>650</td>
<td>208.5</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모든공업단지의 80%에서 조성면적과 중업원수를 기록한 69개에 대한 통계자료임.

로써 확장하고자 한다. 영역한 의미에서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광산업계가" 이전의 70年代 초반과 70年代 중반 이후로 분리하여" 하여서 "광산업계의 이전"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역설한 가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가설이" 시행된 70年代 중반 이후로 "광산업계의 이전" 자체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대도시로 부터 "광산업계가" 이전한 것이 밖에 보겠다.


<table>
<thead>
<tr>
<th>지역</th>
<th>서울</th>
<th>진주</th>
<th>부산</th>
<th>대구</th>
<th>울산</th>
<th>전라남도</th>
<th>전라북도</th>
<th>충청남도</th>
<th>충청북도</th>
<th>경상남도</th>
<th>경상북도</th>
<th>제주도</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2</td>
<td>1</td>
<td>10</td>
<td>28</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43</td>
</tr>
<tr>
<td>진주</td>
<td>3</td>
<td>1</td>
<td>1</td>
<td>24</td>
<td>1</td>
<td>1</td>
<td>3</td>
<td>8</td>
<td>1</td>
<td>8</td>
<td>8</td>
<td></td>
<td>8</td>
</tr>
<tr>
<td>부산</td>
<td>2</td>
<td>1</td>
<td>1</td>
<td>6</td>
<td>2</td>
<td>2</td>
<td>1</td>
<td>5</td>
<td>1</td>
<td>1</td>
<td>1</td>
<td>6</td>
<td>128</td>
</tr>
<tr>
<td>대구</td>
<td>102</td>
<td>1</td>
<td>1</td>
<td>30</td>
<td>1</td>
<td>1</td>
<td>712</td>
<td>1</td>
<td>1</td>
<td>1</td>
<td>1</td>
<td>66</td>
<td></td>
</tr>
<tr>
<td>울산</td>
<td>672</td>
<td>6</td>
<td>2</td>
<td>30</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712</td>
</tr>
<tr>
<td>전라남도</td>
<td>6</td>
<td>1</td>
<td>1</td>
<td>5</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6</td>
</tr>
<tr>
<td>전라북도</td>
<td>17</td>
<td>1</td>
<td>1</td>
<td>4</td>
<td>1</td>
<td>2</td>
<td>27</td>
<td>2</td>
<td>2</td>
<td>2</td>
<td>2</td>
<td>2</td>
<td>77</td>
</tr>
<tr>
<td>충청남도</td>
<td>5</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8</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8</td>
</tr>
<tr>
<td>충청북도</td>
<td>3</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6</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6</td>
</tr>
<tr>
<td>경상남도</td>
<td>16</td>
<td>1</td>
<td>33</td>
<td>2</td>
<td>1</td>
<td>6</td>
<td>54</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td>
<td>128</td>
</tr>
<tr>
<td>경상북도</td>
<td>7</td>
<td>65</td>
<td>6</td>
<td>2</td>
<td>6</td>
<td>1</td>
<td>1</td>
<td>82</td>
<td>0</td>
<td>0</td>
<td>0</td>
<td>0</td>
<td>1092</td>
</tr>
<tr>
<td>합계</td>
<td>834</td>
<td>78</td>
<td>40</td>
<td>43</td>
<td>72</td>
<td>1</td>
<td>1</td>
<td>2</td>
<td>4</td>
<td>3</td>
<td>7</td>
<td>7</td>
<td>0</td>
</tr>
</tbody>
</table>


5) "광산업계가" 이전의 결과가 있음을 이는 1970~80년 기간동안의 "광산업계" 이전은 경제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가설"에 두려워지기는 임중하다고 하겠다.
의한 이이, 기타에 해당되는 업체의 수는 697
것이며, 정부가 적절한 이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부가 적절히 또는 이전명령에 해당
되는 업체의 수는 335개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정부가 적절히 또는 이전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중 92%가 서울로부터 경계로 이전하

〈표 9〉 前所在地別・事由別 移轉事業體

<table>
<thead>
<tr>
<th>前所在地</th>
<th>事業上</th>
<th>市場化為</th>
<th>政府施策</th>
<th>移轉命令</th>
<th>土地收用</th>
<th>其他</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477</td>
<td>14</td>
<td>159</td>
<td>113</td>
<td>48</td>
<td>23</td>
<td>834</td>
</tr>
<tr>
<td>釜山</td>
<td>41</td>
<td>1</td>
<td>23</td>
<td>7</td>
<td>4</td>
<td>2</td>
<td>78</td>
</tr>
<tr>
<td>大邱</td>
<td>26</td>
<td>0</td>
<td>8</td>
<td>1</td>
<td>4</td>
<td>40</td>
<td></td>
</tr>
<tr>
<td>仁川</td>
<td>26</td>
<td>2</td>
<td>8</td>
<td>2</td>
<td>1</td>
<td>43</td>
<td></td>
</tr>
<tr>
<td>京畿</td>
<td>49</td>
<td>2</td>
<td>8</td>
<td>3</td>
<td>5</td>
<td>5</td>
<td>72</td>
</tr>
<tr>
<td>京原</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d>1</td>
<td>1</td>
</tr>
<tr>
<td>陰北</td>
<td>1</td>
<td>0</td>
<td>0</td>
<td>0</td>
<td>0</td>
<td>1</td>
<td>1</td>
</tr>
<tr>
<td>陰南</td>
<td>2</td>
<td>0</td>
<td>0</td>
<td>0</td>
<td>0</td>
<td>2</td>
<td>2</td>
</tr>
<tr>
<td>全北</td>
<td>4</td>
<td>0</td>
<td>0</td>
<td>0</td>
<td>0</td>
<td>4</td>
<td>4</td>
</tr>
<tr>
<td>全南</td>
<td>2</td>
<td>0</td>
<td>0</td>
<td>0</td>
<td>0</td>
<td>3</td>
<td>3</td>
</tr>
<tr>
<td>慶北</td>
<td>3</td>
<td>0</td>
<td>2</td>
<td>0</td>
<td>1</td>
<td>7</td>
<td>7</td>
</tr>
<tr>
<td>慶南</td>
<td>5</td>
<td>1</td>
<td>0</td>
<td>0</td>
<td>0</td>
<td>7</td>
<td>7</td>
</tr>
<tr>
<td>濟州</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計</td>
<td>637</td>
<td>20</td>
<td>208</td>
<td>127</td>
<td>60</td>
<td>40</td>
<td>1,092</td>
</tr>
</tbody>
</table>

〈표 10〉 現所在地別・事由別 移轉事業體

<table>
<thead>
<tr>
<th>現所在地</th>
<th>事業上</th>
<th>市場化為</th>
<th>政府施策</th>
<th>移轉命令</th>
<th>土地收用</th>
<th>其他</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34</td>
<td>1</td>
<td>0</td>
<td>1</td>
<td>2</td>
<td>5</td>
<td>43</td>
</tr>
<tr>
<td>釜山</td>
<td>6</td>
<td>1</td>
<td>0</td>
<td>0</td>
<td>0</td>
<td>1</td>
<td>8</td>
</tr>
<tr>
<td>大邱</td>
<td>3</td>
<td>0</td>
<td>1</td>
<td>0</td>
<td>1</td>
<td>3</td>
<td>8</td>
</tr>
<tr>
<td>仁川</td>
<td>89</td>
<td>6</td>
<td>12</td>
<td>10</td>
<td>8</td>
<td>3</td>
<td>128</td>
</tr>
<tr>
<td>京畿</td>
<td>405</td>
<td>7</td>
<td>135</td>
<td>105</td>
<td>38</td>
<td>22</td>
<td>712</td>
</tr>
<tr>
<td>京原</td>
<td>2</td>
<td>0</td>
<td>3</td>
<td>1</td>
<td>0</td>
<td>6</td>
<td>6</td>
</tr>
<tr>
<td>陰北</td>
<td>5</td>
<td>1</td>
<td>3</td>
<td>0</td>
<td>1</td>
<td>0</td>
<td>10</td>
</tr>
<tr>
<td>陰南</td>
<td>15</td>
<td>0</td>
<td>6</td>
<td>2</td>
<td>3</td>
<td>1</td>
<td>27</td>
</tr>
<tr>
<td>全北</td>
<td>0</td>
<td>3</td>
<td>2</td>
<td>1</td>
<td>2</td>
<td>0</td>
<td>8</td>
</tr>
<tr>
<td>全南</td>
<td>5</td>
<td>1</td>
<td>0</td>
<td>0</td>
<td>0</td>
<td>6</td>
<td>6</td>
</tr>
<tr>
<td>慶北</td>
<td>29</td>
<td>0</td>
<td>20</td>
<td>1</td>
<td>1</td>
<td>3</td>
<td>54</td>
</tr>
<tr>
<td>慶南</td>
<td>44</td>
<td>0</td>
<td>26</td>
<td>6</td>
<td>4</td>
<td>2</td>
<td>82</td>
</tr>
<tr>
<td>濟州</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計</td>
<td>637</td>
<td>20</td>
<td>208</td>
<td>127</td>
<td>60</td>
<td>40</td>
<td>1,092</td>
</tr>
</tbody>
</table>

36
VII. 结論 및 政策建議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工業配置政策를 立地
統制政策, 立地誘因政策, 工業園地의 造成으
로 분류하여 이러한 정책이 낙후지역 경제활
성화에 기인 영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立地
統制政策으로는 공공의 신설이나 증설의 허가
와 이전협정의 있는 그 효과는 대체로 대도
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의 工業再配置에 국한
되어 낙후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는 거
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立地誘因
政策으로는 지방이전 준비금, 지방이전사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무차별공제 또는 일시상
각, 공장양도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부
가세 및 범인세의 면제, 지방세의 면제 등이
있지만 이러한誘因施策은 立地的으로 中立的
인 工業體의 地方이전을 유발하기는 불충분하
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째, 工業園地의 造成
또한 地域経済의 發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
요한 수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地方建設이나 特
殊基地가 일정지역에 전주되어 지역간의 격차
를 심화시키고 있다. 地域経済의 發展화를 위
해 설립된 地方공립단지는 이에 따른 지원수
단의 미비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서의 假説을 立證하기 위하여 1970년부
터 1980년 기간중 기업의 이전실태를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로부터 지방으로 이
전한 기업의 수는 모두 합해서 318개로서
기업체의 이전이 工業配置政策에서 의도한 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의 효과는 대
도시로부터 地方地域으로 기업체를 再配置
시키는 데 주중된 반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
소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工業配置政策의 問題들은 정책의 焦點
이 기업체의 이전에 맞추어 있는 반면 신규
기업이 낙후지역으로 地方로 이전하는 조치는
결과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체의 이전이란
이에 따른 자본의 불안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와
同の 強制的 統制手段으로 시행해야
고 하면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큰 阻害要因이 될 것
이다.

반면에 신규기업의 地方는 선정하는 과정에
서 그 결정을 無観 or 金融上的誘因施策으로
영향을 주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기업이
란 종업없이 生産 or अनुक्रम화되는 것이므로 낙
후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즉 공업의 대도시권으로부터 낙후지역으로 재
배치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地域経済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정책의 主
眼點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부언하면 移動를
중심화하는 시책으로부터 새로운 기업이 落後地
域에 地方로 이전하는 시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政策의 方向이 調整되어야 할 것이
다. 다른 나라의 工業配置政策은 移動促進과
新規企業의 地方入住誘因의 두 가지 方面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優先화를 두
고 있다는 사실은 落後 地方経済에 많은 시사
점을 준다.

新規企業의 地方立地을 추천하기 위하여는
따라서 같은 政策方案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째, 현재 首都圈에서 실시되는 것과 유사
한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에 분포하여 개발촉진 지역으로 분류하여 개발촉진지역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작업에 주고 있는 보전 및 특별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른 영업비용의 감소가 문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체채무나 특별임대료를 드립니다. 이에 따른 임대금 수익의 감소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해체채무나 특별임대료를 부과하여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화장품 및 유연한 이용이 필요해져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여 개발촉진 지방에 기업이 신설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줄로 양호한 구시대적지역의 확대에 있어서 지역 간의 간호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특히 각 주 소재지와 도시의 성장에 따라 지역 간의 간호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동아의 경우에 유행 외교통수를 통해서 소득의 休日이 허용되는 기준에 개발촉진지역에 기업이 신설되는 경우를 포함시기는 것이다.

参考文献

建設部,『第5次 5年計画 建設部門 修正計画』, 1983.
經濟企計院,『第5次5年計画 経済及び社会開発計画』, 1981.
國土開発研究院,『第2次 國土綜合開発計画 國土開発基盤の整備』, 1982.
______,『首都圈整備基本計画案』, 1981.
徐昌源,『國土開發と地域隔差に関する研究』, 『國土研究』, 1982.
李廷植,『全北開發今後이 문제연구?』, 『國土基礎』, 1982.12.

______,『韓國의 地域隔差와 開発政策』, 『地籍』, 1980.
全羅北道廳,『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1981.
全北大校校,『전라북도 장기개발계획을 위한 기본구성』, 1982.
韓國產業銀行,『韓國의 産業 上, 下』, 1984.
黃明燼,『韓國의 지역격차와 지역 경제』, 『國土研究』, 1982.
______,『地方化時代에 부응한 地域開発의 方向』, 『國土計画』, 1984.


